

광주시청 '상무시대' 20년... 도심융합특구 변화 모색

군부대 '황무지'에서 행정·경제 중심으로... 시청 공무원 4197명
지역내총생산 25조→45조원, 수출액 40억 달러→177억 달러
광주 경제, 인공지능·자동차 생산 등 미래산업 전진기지 도약 중

광주시청(사)이 계림동 시대를 접고 '상무지구 시대'를 연 지 올해로 꼭 20년째다.

상무지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때 군부대 주둔 지역으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상무지구는 시청 이전 효과 등으로 광주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시청사 이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화려했던 신도심은 구도심으로 바뀌었고, 노후 아파트 증가와 상권 위축, 인구 유출 등으로 성장세도 정체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다.

광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상무지구 일대를 재단정하고 '제2의 상무지구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과 젊은 인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따른 거주 인구 감소, 정체된 지역경제 상황 등은 해결과제로 꼽힌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69년부터 35년간 동구 계림동에 있었던 광주시청은 2004년 3월 30일 서구 상무지구로 이전, 올해로 이전 20년을 맞이했다. 상무지구는 광주시청이 옮겨오기 전 기본 상권은커녕 아파트도 미분양될 정도로 비인기 지역이었지만, 시청 이전 후 20년 동안 광주의 중심이 됐다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다만 상무지구는 시청사 이전 10년째인 2014년과 비교해선 인구가 줄고 숙박·음식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중심 상권 이동에 따라 3900여 곳에 이르던 숙박 및 음식점은 현재 1735개로 반 토막이 났다. 인구도 광주 전체 인구의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상무1동을 기준으로 2004년 2만2221명에서 2014년에는 2만4946명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 기준 2만3988명으로 1000명 가까이 줄었다.

상무지구 시대를 이끌어온 시청 조직은 크게 확대됐다.

시청조직은 2004년 10개 실·국·본부 40개과에서 2014년 11개 실·국·본부 52개과로 늘어난 데 이어 2024년 기준 15개 실·국·본부, 11관·6담당관 55개과로 확대됐다. 정원도 2681명→3178명→4197명(소방본부·의회사무처 포함)으로 늘었다.

특히 대폭 증가한 여성 공무원 수가 눈에 띈다. 전체 정원 중 여성 공무원은 2004년 410명(정원

대비 15.3%)에서 2014년 727명(22.9%)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현재 1150명(42%·휴직·과전 등 제외)으로 급증했다.

광주시는 확대된 행정력을 기반으로 상무지구의 쇠퇴를 막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다양한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국토부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상무지구를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토부는 2020년 12월 광주시 서구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선상의 벨트와 광주보훈회관 인근 농지 등 상무지구 일대 85만㎡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한 상태다.

광주시는 오는 2031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지정 지역인 상무지구 일원에 6140억원(추정)을 투입해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주거·산업·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기성 '혁신창업 경제특구'로 조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재건과 함께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주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해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

실제 광주시 지역 산업·경제는 체질개선에 성공하면서 인공지능(AI)과 미래모빌리티(미래차 신규 국가산단 유치·자동차 생산공장 2곳 등) 산업, 복합소평물 등을 주축으로, 대한민국 대표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도별 경제 규모 등을 가능하는 지역내총생산(GRDP)도 2004년 25조원대에서 20년이 흐른 현재 두 배 가까이 늘어난 45조원대로 뛰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도 40억 달러에서 177억 달러로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광주의 지역내총생산이 여전히 전국 지역내총생산(2166조원)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광주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이 50조원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지역으로, 전년과 비교해도 울산 등이 8조원씩 늘어나는 사이 1조원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청이 상무지구로 옮긴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군부대가 주둔했던 '상무대'를 개발한 상무지구는 광주의 행정·경제 중심지로 부상했다. 광주시청사 앞 평화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고층 오피스텔이 자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민원인 위법행위, 기관 차원 직접 고발이 원칙”

행안부, 대응지침 개정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해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강화 대책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

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 전담 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 대응 전담 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처리 부서는 현행법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악성 민원 발생 보고를 하고, 법적 대응 전담 부처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개정 지침은 이와 함께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 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정부, 수용 검토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수정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수용할지)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비리 사실로 ▶6면

다시 쓰고 고쳐 쓰고... 지구 살리는 한걸음 ▶18면

타이거즈 전망대-대구 원정·SSG와 홈경기 ▶22면

날씨의 기록, 그리고 그날의 기억을 함께 하다.

기상·기후 사진전

전시기간 | 2024. 5. 1.(수) ~ 26.(일)
관람시간 | 10:00~18:00
전시장소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관람문의 | 061-287-1071~2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광주지방기상청